

박물관·미술관 진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윤계형

KIR



박물관 · 미술관 진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Museum and
Art Gallery Support Legislation

연구책임자 : 윤계형(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Yun, Gye-Hyeong

2019. 12. 31.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연 구 진

| | | | |
|------|-----|---------|------------|
| 연구책임 | 윤계형 | 한국법제연구원 | 연구위원 |
| 심의위원 | 이현수 | 건국대학교 |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 강문수 | 한국법제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
| | 차현숙 | 한국법제연구원 | 연구위원 |

요 약 문

I. 배경 및 목적

- 박물관과 미술관은 문화와 예술 뿐만 아니라 학문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공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로서의 중요성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으며, 국민의 삶의 질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융복합 문화시설이므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고 있으며 더욱이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과 지방분권 등의 새로운 시대적 화두의 등장을 기반으로 지역의 박물관·미술관의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적극적인 입법정책이 필요한 시점임
- 한편 최근 박물관 정책과 미술관 정책이 통합되어 중장기 계획이 발표되는 등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생겨나고 있는바 이러한 박물관과 미술관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과 여건의 변화 속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박물관미술관법’)을 검토하여 입법적 미비점이나 개선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박물관·미술관을 둘러싼 사회와 정책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박물관미술관법의 입법정책적 한계를 살펴보고, 현행 박물관미술관법의 입법 체계 및 입법 연혁을 고찰하고자 함
- 또한 박물관·미술관의 정책기반을 체계화하고, 내실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제도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새로운 입법정책적 쟁점을 도출하여 검토함으로써 박물관미술관법의 개정방향과 구체적인 개정방안을 제시하였음

II. 주요 내용

- 박물관미술관법은 1991년 제정된 이래 2차례의 전부개정과 11차례의 일부개정이 있었으며, 1999년 제1차 개정 당시 학예사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박물관및미술관 진흥위원회’를 설치하였음. 해당 위원회 규정은 2003년 제3차 개정에서 삭제되었음. 이후 2016년 제10차 개정에서 박물관·미술관의 설립 사전 평가제가 도입되었으며, 평가인증제가 도입되었음
- 현행 박물관미술관법은 총칙, 국립박물관과 국립 미술관,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 등록, 관리와 운영·지원, 평가와 지도·감독, 운영자문·협력 등 총 9개의 장·40개 조로 구성되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박물관미술관법의 체계적 문제점과 주요 쟁점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 및 구체적인 개정방안을 제시하였음
 - 박물관미술관법의 개선방향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개선방향
 - 박물관 및 미술관의 효과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개선방향
 - 일반법으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한 개선방향
 - 박물관미술관법의 개정방안
 - 박물관·미술관 정책에 관한 책무조항과 계획조항의 분리
 - ‘박물관·미술관정책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박물관·미술관 등록제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 박물관·미술관 대상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 적용 범위 관련 열거방식의 폐지

Ⅲ. 기대효과

- 박물관미술관법을 중심으로 관계 법체계의 연혁과 규율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제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박물관과 미술관의 체계적이고도 내실 있는 운영관리와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박물관과 미술관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제도개선사항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관련 분야의 연구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주제어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 미술관, 위원회, 평가인증, 등록제도

Abstract

I. Background and purpose

- Museums and art galleries have spatial meanings that collectively contain culture, art, and science. Furthermore the importance of a ‘close-to-life social infrastructure’ has been newly emerging in recent years, and a new approach is required because it is a convergence cultural facility that can directly affect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 In particular, the rapid development of technologies such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advent of the decentralization era have increased the demand for services in local museums and art gallerie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review legislative flaws or improvement measures by reviewing the ‘Museum and Art Gallery Support Act’.
- This study analyzed the legislative policy limitations, legislative system and legislative history of ‘Museum and Art Gallery Support Act’, focusing on social and policy issues surrounding museums and art galleries.
- In addition, a new legislative policy issue was drawn up and reviewed in order to systematize the policy base of museums and art museums, and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a legal system that can operate effectively.

II. Main Content

- Since the Museum and Art Gallery Support Act was enacted in 1991, there have been a total of 2 revisions and 11 revisions. When the first revision was made in 1999, a legal basis on ‘Curators of Museums and Art Galleries’ was introduced, and the ‘Museum and Art Gallery Promotion Committee’ was established. In the 10th revision(2016), the pre-evaluation system for museums and art galleries, the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system was introduced.
- Currently, the Museum and Art Gallery Support Act includes general rules, and the administrative management on the national museums and national art galleries, public museums and public art galleries, private museums and private art galleries, university museums and university art galleries.
- This study analyzed the major problems of the Museum and Art Gallery Support Act and suggested specific improvement measures.
 -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the Museum and Art Gallery Support Act
 - Improvement direction to strengthen the promotion policy of museums and art galleries
 - Improvement direction for effective operation management of museums and art galleries
 - Improvement direction for strengthening status as a general law
 - Revision of the Museum and Art Gallery Support Act
 - Separation of responsibility and planning provisions for museum and art gallery policies

- Establishment of a legal basis for the ‘Museum and Art Gallery Policy Committee’
- Revision of legislation to strengthen the linkage between the museum and art gallery registration system
- Establishment of legal basis for the actual survey of museums and art galleries
- Elimination of enumeration methods related to scope of application

III. Expected Effect

- The expected effect of this study is to promote the systematic development of museums and art galleries by closely analyzing the history and discipline of the related legal system centered on the Museum and Art Gallery Support Act and deriving legal improvements.
- This study can be used as a reference in future research in related fields by deriving a plan to legally support comprehensive and diverse system improvement for the promotion of museums and art galleries.

▶ **Key Words** : Museum and Art Gallery Support Act, Museum, Art Gallery, Museum and Art Gallery Policy Committee,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system for museums and art galleries, Museum and art gallery registration system

목차

박물관·미술관 진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 |
|----------------|---|
| 요 약 문 | 5 |
| Abstract | 9 |

제1장 서론 / 17

| | |
|-----------------------|----|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 |
| 1. 연구의 필요성 | 19 |
| 2. 연구의 목적 | 20 |
| 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1 |
| 1. 연구의 범위 | 21 |
| 2. 연구의 방법 | 22 |

제2장 박물관미술관법의 입법연혁 및 입법체계 / 23

| | |
|--------------------------------|----|
| I. 박물관미술관법의 제정배경 및 입법연혁 | 25 |
| 1. 박물관미술관법의 제정 이전 | 25 |
| 2. 박물관미술관법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 27 |
| 3. 박물관미술관법의 개정경과 및 연혁 분석 | 28 |
| II. 박물관미술관법의 구성 및 주요내용 | 38 |
| 1. 박물관미술관법의 구조 및 체계 | 38 |
| 2. 박물관미술관법의 주요 내용 | 39 |

목차

박물관·미술관 진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3장 박물관미술관법의 법적 문제점 검토 / 63

| | |
|-----------------------------------|----|
| I. 박물관미술관법의 구조 및 체계의 문제점 | 65 |
| 1. 총칙 규정의 체계에 관한 사항 | 65 |
| 2. 규율의 연계성에 관한 사항 | 68 |
| 3.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 69 |
| II. 박물관미술관법의 주요 쟁점별 문제점 | 72 |
| 1. 박물관·미술관 관련 정책 추진체계의 불명확성 | 72 |
| 2. 박물관·미술관 관련 위원회 규율의 산재 및 공백 | 73 |
| 3.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미술관 정책기능의 한계 | 75 |
| 4. 박물관·미술관 등록 및 평가제도의 운영체계 실효성 미흡 | 77 |

제4장 박물관미술관법의 개선방향 및 개정방안 / 81

| | |
|--------------------------------------|----|
| I. 박물관미술관법의 개선방향 | 83 |
|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개선방향 | 83 |
| 2. 박물관 및 미술관의 효과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개선방향 | 84 |
| 3. 일반법으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한 개선방향 | 85 |
| II. 박물관미술관법의 쟁점별 개정방안 | 86 |
| 1. 박물관·미술관 정책에 관한 책무조항과 계획조항의 정비 | 86 |
| 2. ‘박물관·미술관정책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89 |
| 3. 박물관·미술관 등록제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 92 |
| 4. 적용 범위 관련 규정의 열거방식 폐지 | 94 |
| 5. 박물관·미술관 대상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 95 |

목차

박물관·미술관 진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5장

결 론 / 97

참고문헌 101

제1장 서론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1장 서론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여가생활을 위하여 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문화기관이자 평생교육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¹⁾ 또한 박물관과 미술관은 문화와 예술뿐만 아니라 학문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공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로서의 중요성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으며,²⁾ 더욱이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과 지방분권 등의 새로운 시대적 화두의 등장을 기반으로 지역의 박물관·미술관의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전시물 및 전시방식들이 시도되고 있다. 이처럼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융복합 문화시설로서의 박물관과 미술관의 새로운 위상 전개에 따라 기존과는 다른 학술적·실무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정책적 환경에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기존에는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박물관(박물관 발전 기본구상 2012)과 미술관(미술진흥중장기계획 '18-'22)

1) 2003년 기준 355개관(박물관 289, 미술관 66)에서 2018년 1,124개관(박물관 873, 미술관 251)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수도권 35.5%, 수도권 외 64.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박물관·미술관-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2019-2023)-, 2019.6, 1면.

2) 국무조정실(관계부처합동),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 3개년 계획(2020-2022), 2019.4.15.

을 분리하여 이원적으로 운용하여 왔으나, 최근 박물관 정책과 미술관 정책이 통합되어 중장기 계획이 발표되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생기고 있으며, 해당 행정계획에 따른 법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박물관과 미술관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과 여건의 변화 속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박물관미술관법’)을 검토하여 입법적 미비점이나 개선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박물관미술관법은 1991년 제정된 이래 2차례의 전부개정과 11차례의 일부개정이 있었으나,³⁾ 1999년 전부개정 이후 법의 구성체계 및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정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실정과 맞지 않거나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개선사항을 법제에 반영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문화 분야의 대표적인 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둘러싼 사회와 정책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박물관미술관법의 입법정책적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박물관미술관법이 어떠한 입법목적を 가지고 제정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변화를 거듭하여 왔는지를 살펴보고 검토하여야 한다.

따라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정책기반을 체계화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진시키며, 문화예술 및 학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박물관미술관법 본래의 입법목적을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법제도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새로운 입법정책적 쟁점을 도출하고 그를 검토함으로써 박물관미술관법의 개정방향과 쟁점별 구체적인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1999년과 2007년 2차례의 전부개정이 있었으나, 2007년 전부개정은 알기 쉬운 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었음

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은 박물관미술관법이며 시행령, 시행규칙을 대상으로 하며, 제2장에서는 박물관·미술관의 1999년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변화되어 온 흐름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법제 개편을 통해 입법목적이 실현되었는지를 점검하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박물관미술관법 자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법체계적 문제와 법해석상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문화예술진흥법」⁴⁾, 「문화재보호법」⁵⁾, 2016년 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⁶⁾, 2019년 제정된 「국립항공박물관법」⁷⁾ 등과의 구조적 체계성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2019~2023)」에서 제시된 다수의 세부적 전략과 핵심과제를 대상으로 실제로 법제정비가 필요한 수요를 걸러내고 그러한 규율수요를 어떠한 개정안으로 담아내야 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제4장에서는 제2장과 제3장에서 분석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박물관미술관법의 개선방향과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법제개선방안은 박물관미술관법 자체 내의 규정들뿐만 아니라 「문화재보호법」이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다른 유관 법제에서의 규정내용 및 체계와도 합리적인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으며, 박물관미술관법을 적용하는 일선 행정청의 실무 여건, 등록제의 구체적인 운용 현실 등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⁸⁾

4)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16호, 2018. 10. 16., 일부개정]

5)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일부개정]

6) [시행 2019. 7. 1.] [법률 제16165호, 2018. 12. 31., 타법개정]

7) [시행 2019. 11. 21.] [법률 제16490호, 2019. 8. 20., 제정]

8) 본 연구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2019년 3월 각 정부부처에서 제안요청 받은 연구과제 목록 중 하나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박물관미술관법 소관부처)에서 연구를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 박물관미술관법 관련 선행논문이나 연구보고서들을 검토하는 방식의 문헌연구를 수행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박물관미술관법 및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그간의 제·개정 연혁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문헌연구를 하는 방법과 더불어 법령 소관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자료의 열람, 소관부처의 의견회람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입법소요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 선행연구를 담당했던 연구자 및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회의 개최 및 서면 자문 등을 통하여 연구내용을 점검하였다. 이러한 연구수행방법은 기존 문헌연구에서 나타나는 한계를 벗어나, 법령 집행상 나타나는 실무적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안하였다. 따라서 연구과제의 쟁점 및 범위에 대해서는 한국법제연구원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의 협의를 통해서 확정되었음을 밝혀둔다.

제2장

박물관미술관법의 입법연혁 및 입법체계

I. 박물관미술관법의 제정배경 및 입법연혁

II. 박물관미술관법의 구성 및 주요내용

제2장

박물관미술관법의 입법연혁 및 입법체계

I. 박물관미술관법의 제정배경 및 입법연혁

1. 박물관미술관법의 제정 이전

(1) 박물관법의 제정과 시행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박물관미술관법이 1991년 제정되기 이전의 규율을 찾아보면, 「박물관법」⁹⁾이 1984년 제정되어 시행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¹⁰⁾ 「박물관법」의 제정이유를 보면, 박물관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국가가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지도를 행하고 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통문화유산을 올바르게 보존·이용하고 나아가 문화·예술 및 학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목적¹¹⁾을 가지고 있었다.¹¹⁾

(2) 박물관법의 주요내용 및 특징

「박물관법」은 제정된 이래 타법개정으로 인한 개정¹²⁾ 이외에는 개정된 바가 없으므로 내용은 제정 당시 법률과 동일하게 시행되었다. 당시 「박물관법」은 총 22개 조문으로 구

9) [시행 1985. 7. 1.] [법률 제3775호, 1984. 12. 31., 제정]

10)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참조 (2019.12.23. 최종접속)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609&lsId=&efYd=198507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2019.12.23. 최종접속)

12) [시행 1990. 1. 3.] [법률 제4183호, 1989. 12. 30., 타법개정]

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¹³⁾ 1) 지방자치단체, 민법에 의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박물관은 문화공보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박물관에 대하여는 이를 지원·육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2) 또한 박물관에는 박물관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등 전문적인 사항을 담당하는 학예직원을 두도록 하며, 3) 문화공보부장관은 박물관이 그 시설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이나 그 설치목적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그 시정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박물관에 대하여는 정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4) 사립박물관이 그 설치목적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은 관람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에 대하여 필요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6) 문화공보부장관은 박물관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는 시설로서 일반공중의 이용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준박물관 시설로 지정하여 지도·육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현재의 박물관미술관법과 비교해보면, 첫째, ‘미술관’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으며, 법률의 규율 내용에서도 미술관은 제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현재는 박물관의 종류를 국립 박물관, 공립박물관, 사립박물관, 대학 박물관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박물관법」에서는 공립박물관과 사립박물관으로 구분하고 있다(「박물관법」 제2조). 셋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계획이나 시책 마련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넷째, 현재의 등록제도와는 세부적인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는 다르지만 박물관에 관한 등록제도를 두고 있다는 점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박물관법」 제7조). 다섯째, 현행 박물관미술관법과는 달리,¹⁴⁾ 「박물관법」에서는 박물관의 설치·운영 및 박물관 자료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는 의무조항을 두고 있다.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609&lsId=&efYd=198507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2019.12.23. 최종접속)

14) 현행 박물관미술관법 제32조에서는 자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박물관법」에서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는 자문 절차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2. 박물관미술관법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1) 박물관미술관법의 제정배경

박물관미술관법은 1991년 11월 30일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을 유도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지원제도를 강화하여 그 설립을 촉진하며, 기타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전면 보완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¹⁵⁾ 기존 「박물관법」에서는 박물관에 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는데 반해, 당시 「박물관·미술관진흥법안」에서는 미술관의 개념을 구분하여 추가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¹⁶⁾

(2) 제정 박물관미술관법의 주요내용

제정 당시 박물관미술관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⁷⁾

- ① 박물관의 종류를 운영주체에 따라 국립·공립 및 사립박물관으로, 취급 자료의 범위에 따라 종합박물관과 전문박물관으로 구분하고, 미술관의 종류를 운영주체에 따라 국립·공립 및 사립미술관으로 구분함.
- ② 과학·기술전문박물관 및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에 설치·운영하는 박물관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15) [시행 1992.6.1.] [법률 제4410호, 1991.11.30., 제정]

16) 당시 제정법률안에 대한 소관위원회(문화공보위원회) 심사보고서를 보면, “미술관의 개념을 박물관 개념에서 분리하여 이 법에 신설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한국미술협회 등 미술 관련 단체의 미술관 명칭사용요구가 반영된 것이나, 민속관·기념관 등 여타 특정분야의 박물관자료를 수집·전시하는 전문박물관에서도 별도 명칭 사용요구가 제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이 법안에서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설립주체를 단체 또는 개인에게까지 확대한 것은 그동안 발전이 부진한 박물관 기능의 생활화를 위해 박물관 특히 미술문화의 공개념화와 국민적 문화향수기회 확대를 위해 기업이나 개인에 의한 박물관·미술관 설립을 촉진코자 하는 것으로서 이법의 제정으로 그동안 설립을 준비해 온 단체 및 개인 수장가들에 의한 박물관·미술관 설립이 활발해 질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11937>)

17)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11937>)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③ 박물관 및 미술관은 필요한 전문직원과 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명칭·소재지·자료 목록 등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④ 국립박물관 또는 국립미술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미리 문화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 ⑤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문화부장관으로부터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도시계획법·도로법·수도법·하수도법·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지확대개발촉진법·토지구획정리사업법등에 의한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하며, 문화부장관은 승인 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 ⑥ 국립박물관 및 국립미술관,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이 아니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⑦ 박물관 및 미술관 상호간의 자료의 유통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원등 다른 문화시설과 협력하도록 함.

3. 박물관미술관법의 개정경과 및 연혁 분석

박물관미술관법은 1991년 제정된 이래 2차례의 전부개정(두 번째 전부개정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로 인한 전부개정), 12차례의 일부개정(14차례의 타법개정은 제외)이 있었다.

(1) 박물관미술관법의 제1차 개정(전부개정)

박물관미술관법은 제정된 이후 첫 개정을 전부개정형식으로 하게 되는데,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휴관신고, 등록취소제도 등의 정부규제를 폐지함으로써 박물관·미술관의 자율적인 운영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¹⁸⁾

18) [시행 2000. 2. 9.] [법률 제5928호, 1999. 2. 8., 전부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27&query=%EB%B0%95%EB%AC%BC%EA%B4%80#undefined>)(2019.12.23. 최종 접속)

1) 법의 적용범위 확대

당시 전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를 보면,¹⁹⁾ “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모든 박물관·미술관 및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문화시설을 수용하여 이의 육성 및 진흥을 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과학관의 경우에는 「과학관육성법」(법률 제4490호, '91.12.31)에 의하여 설치 및 등록을 하고 있으므로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문화의집’의 경우에도 이의 주기능이 박물관·미술관 성격의 자료를 수집·관리 및 전시하는 것보다는 생활권 내에서의 복합문화프로그램의 운용에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2)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현대미술관의 위상 제고

당시 전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를 보면,²⁰⁾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은 “국내 문화재 및 미술 자료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다른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협력망의 구성·운영 등 국가를 대표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아울러 문화향수의 균형적인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박물관 및 지방미술관을 둘 수 있도록” 하며, 당시 “문화관광부와그소속관련직제(대통령령 제15722호, '98.2.28)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기본법인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의 설치 근거와 기능 등의 위상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3) 학예사 제도 도입

제정법률 제6조에서는 ‘전문직원’ 제도를 두고 있었으나, 이는 국가가 전문성을 인정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아니었고, 전문인으로서 학예사의 양성과 자격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학예사제도를 신설하였다.²¹⁾

19)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15090>)

20)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15090>)

21)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15090>); 해당 검토보고서를 보면, 당시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학예직(학예연구관 및 학예연구사)

4) 박물관및미술관진흥위원회 설치

해당 개정에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국·공·사립박물관 및 미술관별로 운영의 효율화와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전문가, 주민 등의 참여에 의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제7조), 박물관·미술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 등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기구로 운영하도록 규정하였다(제31조). 당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는 1)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 2) 박물관 및 미술관협력망의 구성 및 운영, 3)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예사의 자격과 양성에 관한 사항, 5) 박물관 및 미술관의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박물관 및 미술관의 발전과 운영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제31조 제1항).

(2) 박물관미술관법의 제2차 개정(일부개정)

중전 박물관미술관법의 경우²²⁾ “등록한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을 2월이상 계속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개관 이외에 휴관에 대한 행정적 관리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와 같은 휴관신고제를 폐지하는 일부개정이 이루어졌다.²³⁾

제도가 있었으나” 향후 “문화행정이 체계화되어 학예직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며, 중앙행정기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및 문화재 관련 분야는 물론 사회의 각종 문화시설 분야에도 학예사 자격을 가진 전문인력들이 임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22) 법률 제5928호, 1999. 2. 8., 전부개정, 2000. 2. 9. 시행.

23) 법률 제6130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2. 9. 시행.

(3) 박물관미술관법의 제3차 개정(일부개정)

박물관미술관법 제3차 개정은 일부개정으로서²⁴⁾ 박물관·미술관의 설립·운영과 관련된 당시 문화관광부장관의 행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종전에 당시 문화관광부장관이 행사하여 온 박물관·미술관의 등록 및 등록취소,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 등의 행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한편, 박물관·미술관 진흥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시·도지사로 하여금 박물관·미술관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의 경우 그 처분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중앙행정기관 차원에서의 최소한의 행정관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법 제28조제2항). 그 밖에 시·도지사가 박물관·미술관의 등록 및 등록취소,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 등에 관하여 문화재 관련 자문기관이나 박물관협회 또는 미술관협회 등의 자문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박물관·미술관 관련 정책이나 규제의 집행에 전문성과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법 제32조).

특히 제3차 개정에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 규정을 폐지하였다(법 제31조). 그 이유를 살펴보면,²⁵⁾ 해당 규정이 제정된 이래 “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운영된 실적이 없고, 당시 문화관광부가 위원회 정비차원에서 문화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기구로 설치한 ‘문화정책자문위원회’로 갈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 규정을 폐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²⁶⁾

24) 법률 제6904호, 2003. 5. 29., 일부개정, 2004. 1. 1. 시행.

2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 규정의 폐지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유일하게 찾을 수 있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박물관및미술관법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7-8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22304>)

26) 다만, 위 검토보고서에서도 “문화재위원회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에 대해 기대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문화재위원회가 미술관 진흥시책을 자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위 검토보고서, 8면).

(4) 박물관미술관법의 제4차 개정(전부개정)

2007년 박물관미술관법의 두 번째 전부개정은²⁷⁾ 알기 쉬운 법령 정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합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는 수준의 법률 개정이 있었다.²⁸⁾

(5) 박물관미술관법의 제5차 개정(일부개정)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5차 일부개정이 이루어졌다.²⁹⁾ 구체적으로는 문화교육기관으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의 교육적 기능 및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의 정의 및 사업범위에 교육기능을 명시하고, 박물관 협회나 미술관 협회의 허가요건 중 행정청이 광범위하게 재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운용될 여지가 있는 공공 이익 증진 요건을 삭제하였다.³⁰⁾

(6) 박물관미술관법의 제6차 개정(일부개정)

박물관미술관법 제6차 개정은³¹⁾ 박물관자료의 정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무형적 증거물을 추가하여 디지털화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은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국립 박물관 또는

27) 법률 제8347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2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법률 제8347호, 2007. 4. 1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77947&ancYd=20070411&ancNo=08347&efYd=2007041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최종검색일 : '19. 12. 15.).

29) 법률 제8556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7. 7. 27. 시행.

3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법률 제8556호, 2007.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79905&ancYd=20070727&ancNo=08556&efYd=20070727&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최종검색일 : '19. 12. 15.).

31) 법률 제9471호, 2009. 3. 5., 일부개정, 2009. 6. 6. 시행.

국립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시·도지사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³²⁾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자료에 무형적 증거물 추가(법 제2조제3호)

종전의 박물관자료에 대한 정의가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 증거물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무형적 증거물을 주요 대상으로 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사업대상을 제한하고 다원화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박물관자료의 정의에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 증거물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무형적 증거물을 포함하도록 하였다.³³⁾

2) 법의 적용범위 제한(법 제5조 단서 신설)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을 박물관미술관법에 따라서 박물관이나 미술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고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은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³⁴⁾

3)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절차 합리화(법 제16조)

종전의 경우 국립 박물관이나 국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규정하는 한편 그 등록은 시·도지사에게 하도록 하고 있어 그 설립이

3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법률 제9471호, 2009. 3.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91891&ancYd=20090305&ancNo=09471&efYd=20090606&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최종검색일 : '19. 12. 15.).

3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법률 제9471호, 2009. 3.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91891&ancYd=20090305&ancNo=09471&efYd=20090606&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최종검색일 : '19. 12. 15.).

3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법률 제9471호, 2009. 3.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91891&ancYd=20090305&ancNo=09471&efYd=20090606&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최종검색일 : '19. 12. 15.).

원활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실정이라는 판단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절차 합리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법제개정이다. 이에 따라 국립 박물관·국립 미술관의 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은 시·도지사에게 하도록 하는 현행 등록제도의 내용이 이 일부개정을 통하여 확립되었다. 즉 이 당시의 일부개정은 기관 간의 설립 협의가 법적인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이러한 협의 이외에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에 대해서도 등록제를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하지만 기관 간의 설립 협의 절차는 여전히 남겨놓고 등록제와의 연계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것은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7) 박물관미술관법의 제7차 개정(일부개정)

박물관미술관법 제7차 개정은³⁵⁾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의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이용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유(文化享有) 기회증진 등 박물관과 관련된 각종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박물관미술관법이 아니라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이라는 법적 성격으로 인하여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박물관미술관법에 마련하여 국립박물관 공연장의 운영, 문화예술 창작품의 개발·보급 및 문화관광상품의 개발·제작·보급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정부의 재정지원과 국유재산의 무상대부·사용·수익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다양한 문화향유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문화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하려는 차원에서 일부개정이 있었다.³⁶⁾

35) 법률 제10367호, 2010. 6. 10., 일부개정, 2010. 12. 11. 시행.

3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법률 제10367호, 2010.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05951&ancYd=20100610&ancNo=10367&efYd=2010121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최종검색일 : '19. 12. 15.).

(8) 박물관미술관법의 제8차 개정(일부개정)

박물관미술관법 제8차 개정은³⁷⁾ 국립·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기부 자료 접수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학예사 자격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³⁸⁾

(9) 박물관미술관법의 제9차 개정(일부개정)

박물관미술관법 제9차 개정³⁹⁾ 박물관 및 미술관의 현장학습 또는 평생학습의 장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즉 박물관 및 미술관의 경우 일반 공중의 문화생활을 위한 문화인프라로서의 의미와 함께 학생과 일반 국민에게 현장학습 또는 평생학습의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과 유사하게 평생교육기관으로 활용되고 있는 도서관의 경우에는 「도서관법」에 도서관의 기능 중 하나가 평생교육의 증진임을 명시하고 있어 도서관의 평생교육 기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은 이와 관련된 정책적 가치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었다.⁴⁰⁾ 이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운영의 목적에 평생교육의 증진을 추가하고, 박물관의 사업에도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개최를 명시함으로써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이 양질의 평생교육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개정이 있었다(제1조,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4조제1항제6호의2 등).

37) 법률 제12135호, 2013. 12. 30., 일부개정, 2014. 3. 31. 시행.

3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법률 제12135호, 201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48831&ancYd=20131230&ancNo=12135&efYd=2014033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최종검색일 : '19. 12. 15.).

39) 법률 제13966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2. 3. 시행.

4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법률 제13966호, 201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80722&ancYd=20160203&ancNo=13966&efYd=20160203&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최종검색일 : '19. 12. 15.).

(10) 박물관미술관법의 제10차 개정(일부개정)

박물관미술관법 제10차 개정은⁴¹⁾ 기존의 박물관미술관법에 대한 수차례의 개정이 박물관·미술관의 양적 확충을 기조로 한 규제완화 성격을 취하면서 발생하게 된 박물관·미술관 설립과 운영상의 한계 및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박물관·미술관의 설립 사전 평가제 도입, 박물관·미술관의 등록제도 개선, 박물관·미술관의 평가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박물관·미술관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⁴²⁾

(11) 박물관미술관법의 제11차 개정(일부개정)

박물관미술관법 제11차 개정은⁴³⁾ 박물관 및 미술관이 자료의 목록 등에 대한 기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자료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수장(收藏)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며, 공립 미술관도 공립 박물관과 같이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공립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⁴⁴⁾ 이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 목록 및 취득·변경·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자료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수장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고 (제9조의2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의무화(제12조의2제1항)하는 한편,

41) 법률 제14204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1. 30. 시행.

4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법률 제14204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83608&ancYd=20160529&ancNo=14204&efYd=20161130&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최종검색일 : '19. 12. 15.).

43) 법률 제15062호, 2017. 11. 28., 일부개정, 2018. 5. 29. 시행.

4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법률 제15062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99099&ancYd=20171128&ancNo=15062&efYd=20180529&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최종검색일 : '19. 12. 15.).

박물관 및 미술관의 폐관 시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는(제22조제1항) 등의 규정 개정이 있었다.

(12) 박물관미술관법의 제12차 개정(일부개정)

박물관미술관법 제12차 개정은⁴⁵⁾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폐관 신고를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개정내용으로 삼고 있다.⁴⁶⁾

(13) 박물관미술관법의 제13차 개정(일부개정)

박물관미술관법 제13차 개정은⁴⁷⁾ 국가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대여 등을 통해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예사 자격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려는 것을 주요 개정내용으로 삼고 있다.⁴⁸⁾ 동 개정내용은 2020년 5월부터 시행된다.

45) 법률 제15817호, 2018. 10. 16., 일부개정, 2018. 11. 17. 시행.

4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법률 제15817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04796&ancYd=20181016&ancNo=15817&efYd=20181117&nwJoYnInfo=Y&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최종검색일 : '19. 12. 15.).

47) 법률 제16597호, 2019. 11. 26., 일부개정, 2020. 5. 27. 시행.

4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법률 제16597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11517&ancYd=20191126&ancNo=16597&efYd=20200527&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최종검색일 : '19. 12. 15.).

II. 박물관미술관법의 구성 및 주요내용

1. 박물관미술관법의 구조 및 체계

현행 박물관미술관법은 총칙, 국립박물관과 국립 미술관,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 등록, 관리와 운영·지원, 평가와 지도·감독, 운영자문·협력 등 총 9개의 장·40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법률 및 이와 관련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등 관련 행정규칙 및 조례 등이 시행되고 있다.⁴⁹⁾

[표] 박물관미술관법 관련 법령 체계

| 구 분 | 명 칭 | |
|------|---------------------|------------------------------|
| 법 률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한 법률 | |
| 시행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 |
| 시행규칙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 |
| | 예 규 |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 운영규정 |
| | 고 시 | 2019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 평가 대상기관 고시 |
| 시행규칙 |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 |
| 시행규칙 |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 |
| | 예 규 |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자료 관리규정 |
| | 예 규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복제 열람 규정 |

4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 구 분 | 명 칭 | |
|------|-----------------------------|--------------------------------|
| 시행규칙 |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 |
| |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 |
| | 훈 령 | 국가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 |
| | 예 규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 조 례 | 강릉시 숲사랑홍보관 운영 조례 포함 약 400여건 | |

2. 박물관미술관법의 주요 내용

(1) 박물관미술관법의 총칙 규정

1) 박물관미술관법의 목적 및 용어 정의

현행 박물관미술관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文化享有)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이 법은 제2조에서 박물관, 미술관 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①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미술관’이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③ ‘박물관자료’란 “박물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④ ‘미술관자료’란 “미술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예술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박물관과 미술관의 구분

이 법은 제3조 제1항에서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박물관을 “① 국립 박물관 :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② 공립 박물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③ 사립 박물관 :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④ 대학 박물관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으로 구분한다.

다음으로 동조 제2항에서 “미술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미술관, 공립 미술관, 사립 미술관, 대학 미술관으로 구분하되, 그 설립·운영의 주체에 관하여는 동조 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의 수행 사업

이 법은 제4조 제1항에서 박물관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① 박물관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②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③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④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강습회·영사회(映寫會)·연구회·전람회·전시회·발표회·감상회·탐사회·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⑤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⑥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간행물·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⑦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⑧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2항에서 미술관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위의 박물관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규정(동조 제1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박물관자료”는 “미술관자료”로 보며, 제6호 및 제7호 중 “박물관”은 “미술관”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적용범위

이 법은 그 적용범위에 있어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관, 예술관, 문화의 집, 야외 전시 공원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는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5조 전단). 이 때에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은 제외한다(동법 동조 단서).

5)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이 법은 제6조에서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① 박물관과 미술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동법 제6조 제1항), ② 학예사는 1급 정(正)학예사,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및 준(準)학예사로 구분하고, 그 자격제도의 시행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법 제6조 제2항), ③ 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학예사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실무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와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동법 제6조 제3항), ④ 제3항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동법 제6조 제4항), ⑤ 학예사는 국제박물관협회의 윤리 강령과 국제 협약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6조 제5항).

현재 ‘박물관미술관법 [시행 2020.5.27.] [법률 제16597호, 2019.11.26., 일부개정]’에 따라 “제6조의2(자격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또는 ② 제6조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 학예사 등급별 자격요건(제3조 관련)

| 등 급 | 자격요건 |
|---------|---|
| 1급 정학예사 | 2급 정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경력인정대상기관”이라 한다)에서의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 자 1. 국공립 박물관 2. 국공립 미술관 3. 삭제<2015.10.6.> 4. 삭제<2015.10.6.> 5. 삭제<2015.10.6.> 6.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가 등록된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 등록된 대학 박물관·대학 미술관 및 외국박물관 등의 기관 중에서 인력·시설·자료의 관리실태 및 업무실적에 대한 전문가의 실사를 거쳐 인정한 기관 |
| 2급 정학예사 | 3급 정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 3급 정학예사 | 1.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 준학예사 | 1.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라 3년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 등 급 | 자격요건 |
|-----|---|
| | <p>3. 「고등교육법」에 따라 2년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p> <p>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사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p> |

※ 비고

1. 삭제 <2009.1.14>
2. 실무경력은 재직경력·실습경력 및 실무연수과정 이수경력 등을 포함한다.
3. 등록된 박물관·미술관에서 학예사로 재직한 경력은 경력인정대상기관 여부에 관계없이 재직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6) 운영위원회

‘박물관미술관법’은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국·공립의 박물관과 미술관(각 지방 분관을 포함한다)은 전문성 제고와 공공 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운영 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7조 제1항), “운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항).

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의 수립과 자료수집 등의 원칙

이 법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공·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육성, 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법 제9조 제1항), “②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에 따라 소관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법 제9조 제2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9조 제3항).

또한 이 법은 “① 박물관과 미술관은 박물관·미술관 자료의 목록 및 자료의 취득·변경·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기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② 박물관과 미술관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전문인력, 수장(收藏)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여야 하며, ③ 제1항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의 자료 목록 및 기록방법 등과 제2항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법 제9조의2).

(2)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

1)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

‘박물관미술관법’은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10조 제1항), “민속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이의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민속박물관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0조 제2항).

이 때에 “국립중앙박물관은 제4조 제1항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0조 제3항). 한편, 이 법은 “국립현대미술관은 역시 제4조 제1항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경우 각 호의 ‘박물관’은 ‘미술관’으로 보며(법 제10조 제5항), 국립민속박물관은 역시 민속에 관하여 제4조 제1항의 사업 외에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경우 각 호의 ‘박물관’은 ‘민속 박물관’으로 본다(법 제10조 제6항).”고 규정하고 있다.

1. 국내외 문화재의 보존·관리
2. 국내외 박물관자료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3. 국내 다른 박물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업무 협조
4. 국내 박물관 협력망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유산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 및 문화향유의 균형적인 증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0조 제4항).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및 국립민속박물관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법 제10조 제7항), 국립중앙박물관에는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법 제10조 제8항).

한편,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 박물관이나 국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법 제11조 제1항), 이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7조)으로 정한다(법 제11조 제2항).

2)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법 제12조 제1항), 이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2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박물관·미술관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법 제12조의2 제1항), 이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7조의2)으로 정한다(법 제12조의2 제2항).

박물관미술관법 시행령 제 7 조의2(공립 박물관·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전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8.>

1. 설립의 목적 및 필요성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 추진계획 및 운영계획
3. 운영 조직 및 인력구성계획
4. 부지 및 시설 명세
5.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및 수집계획

② 사전평가는 반기별로 실시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반기에 실시되는 사전평가를 받으려면 1월 31일까지, 하반기에 실시되는 사전평가를 받으려면 7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상반기에 실시되는 사전평가의 경우에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에 실시되는 사전평가의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해당 사전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사전평가 결과를 사전평가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평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3)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의 설립과 육성

‘박물관미술관법’에 의거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으며(법 제13조 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돕고,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창달(暢達)과 문화 향유를 증진하는 문화 기반 시설로서 지원·육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3조 제2항). 이러한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은 이 법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립·운영하여야 한다(법 제13조 제3항).

4)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

‘박물관미술관법’ 규정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은 교육 지원 시설로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고(법 제14조 제1항), 이러한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은 대학의 중요한 교육 지원 시설로 평가되어야 한다(법 제14조 제2항).” 또한 이 법에 따라서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은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교육·학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되어야 한다(법 제14조 제3항).”

한편,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은 이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법 제15조).

1. 교수와 학생의 연구와 교육 활동에 필요한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수집·정리·관리·보존 및 전시
2.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학술적인 조사·연구
3. 교육과정에 대한 효율적 지원
4. 지역 문화 활동과 사회 문화 교육에 대한 지원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교류·협조
6.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의 체계적 지도
7. 그 밖에 교육 지원 시설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1) 등록 등

이 법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

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16조 제1항). 다만, 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법 제16조 제1항 단서)."

이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갖추어 개관 전까지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제9조 관련)

1. 공통요건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피난 유도 안내정보의 부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한정한다)

다.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가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1) 자료의 해당 분야에의 적합성
- 2) 자료 수집의 적정성
- 3) 자료의 학술적·예술적·교육적·역사적 가치
- 4) 자료의 희소성
- 5)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가 해당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2. 개별요건

가.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 유 형 |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 학예사 | 시 설 |
|-----------|------------------|----------------|--|
| 종합 박물관 | 각 분야별 100점 이상 | 각 분야별 1명 이상 | 1) 각 분야별 전문박물관의 해당 전시실 2) 수장고(收藏庫) 3) 작업실 또는 준비실 4) 사무실 또는 연구실 5)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6)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

| 유 형 |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 학예사 | 시 설 |
|-----------|----------------------------|-------|--|
| 전문 박물관 | 100점 이상 | 1명 이상 |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 제 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4) 자료실 · 도서실 · 강당 중 1개 시설 5)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
| 미술관 | 100점 이상 | 1명 이상 |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 제 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4) 자료실 · 도서실 · 강당 중 1개 시설 5)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
| 동물원 | 100종 이상 | 1명 이상 | 1) 3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전시실을 포함한다)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동물 사육 · 수용 시설 4) 동물 진료 · 검역 시설 5) 사료창고 6) 오물 · 오수 처리시설 |
| 식물원 | 실내: 100종 이상 야외: 200종 이상 | 1명 이상 | 1) 2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6,000 제 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육종실(育種室: 품종 개량 및 개발 연구 공간) 4) 양묘장 5) 식물병리시설 6) 비료저장시설 |

| 유 형 |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 학예사 | 시 설 |
|-----|-------------------|-------|--|
| 수족관 | 100종 이상 | 1명 이상 | 1) 2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수족치료시설 4) 순환장치 5) 예비수조 |

나.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 유 형 |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 학예사 | 시 설 |
|---|---|-------|--|
| 자료관·사료관· 유물관·전시장· 전시관·향토관· 교육관·문서관· 기념관·보존소· 민속관·민속촌· 문화관 및 예술관 | 60점 이상 | 1명 이상 | 1) 82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자료실·도서실 및 강 당 중 1개 시설 4)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
| 문화의 집 | 도서·비디오 테이프 및 컴팩트디스크 각각 300점 이상 | | 1) 다음의 시설을 갖춘 363제곱미터 이상의 문화공간 가) 인터넷 부스(개인용 컴퓨터 4대 이상 설치) 나) 비디오 부스(비디오테이프 레코더 2대 이상 설치) 다) 콤팩트디스크 부스(콤팩트디스크 플레 이어 4대 이상 설치) 라) 문화관람실(빔 프로젝터 1대 설치) 마) 문화창작실(공방 포함) 바) 안내데스크 및 정보자료실 사) 문화사랑방(전통문화사랑방 포함) 2) 도난 방지시설 |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 부터 4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법 제16조 제3항), 이에 따른 등록, 심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8조)으로 정한다(법 제16조 제4항).

2) 등록증과 등록 표시

‘박물관미술관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6조 제3항에 따른 등록심의 결과가 결정된 때에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법 제17조 제1항).”

이 때에 “등록증을 받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하 ‘등록 박물관·미술관’이라 한다)은 국민의 박물관·미술관 이용 편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 간판, 각종 문서, 홍보물, 박물관·미술관 홈페이지 등에 등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법 제17조 제2항).”

3) 등록의 변경 및 등록사실의 통지

등록 박물관·미술관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면 이 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법 제17조의2 제1항), 이에 따른 변경 등록의 허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10조)으로 정한다(법 제17조의2 제2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0조(변경 등록)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하 “등록 박물관·미술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면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그 등록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명칭, 설립자 또는 대표자
2. 종류
3. 소재지
4. 설립자 또는 대표자의 주소
5. 시설명세서
6.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7. 학예사 명단
8.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② 제1항에 따라 변경 등록을 신청하려는 등록 박물관·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등록증(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변경에 한정한다)
2.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 등록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이 기재된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6. 11. 29.]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16. 11. 29.>]

이 때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사는 변경 등록 시에 변경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그 허용 범위 및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라 시정 요구를 하여야 한다(법 제17조의2 제3항).

시·도사는 신규로 등록하거나 변경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매 반기별로 그 등록 또는 변경 등록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17조의3).

4) 사립 박물관·사립 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등

‘박물관미술관법’에 따라 “시·도사는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자가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 계획을 승인할

수 있으며(법 제18조 제1항), 이에 따라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설립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법 제18조 제2항).

또한 시·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립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려면 미리 제20조 제1항 각 호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법 제18조 제3항),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사업 추진 실적이 극히 불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법 제18조 제4항), 시·도지사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설립 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른 협의 기관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법 제18조 제5항).

5) 유희 공간 활용

이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유의 유희 부동산 또는 건물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의 집 등 지역 문화 공간으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법 제19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의 집 등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유희 부동산 또는 건물을 대여(貸與)할 것을 요청하면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유희 부동산 또는 건물 중 폐교시설에 관하여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법 제19조 제2항).”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시·도지사가 제18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허가·인가·지정을 받거나 신고나 협의(이하 이 조에서 ‘허가·인가 등’이라 한다)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20조 제1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개발 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 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 계획의 인가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3.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4.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6.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또한 제18조 제1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 내용을 다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한 때 또는 제22조에 따라 폐관 신고를 하거나 제2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허가나 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며(법 제20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에 응할 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그 허가·인가 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할 수 없다(법 제20조 제3항).

(4) 박물관 및 미술관의 관리와 운영·지원

1) 개관 및 폐관신고

이 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연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일수 이상 일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법 제21조), 등록된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운영하는 자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폐관하려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을 첨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22조 제1항).

이 때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법 제22조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법 제22조 제3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관 신고를 받은 경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법 제22조 제4항).

2) 자료의 양여 등

이 법에 의거하여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상호간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를 교환·양여(讓與) 또는 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으며(법 제23조 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또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무상이나 유상으로 양여·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법 제23조 제2항).

이 때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를 대여받거나 보관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법 제23조 제3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존·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법 제23조 제4항).

3) 경비 보조 등

이 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 제1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법 제24조 제1항).” 또한 “정부는 국영 수송 기관에 의한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수송에 관하여

운임이나 그 밖의 요금을 할인하거나 감면할 수 있으며(법 제24조 제2항),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 제24조 제3항).”

4) 관람료와 이용료

이 법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관람료, 그 밖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으며(법 제25조 제1항),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의 관람료, 그 밖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법 제25조 제2항).

(5) 평가와 지도·감독

1) 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 및 그 취소

이 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후 3년이 지난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법 제26조 제1항).

이 때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에 따른 평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법 제26조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박물관 및 미술관을 인증할 수 있다(법 제26조 제3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에 따른 인증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하 “인증 박물관·미술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사실 등을 공표하여야 하며(법 제26조 제4항), 이러한 평가실시, 평가인증의 기준·절차 및 방법과 인증 유효기간, 인증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으로 정한다(법 제26조 제5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려면 해당 연도의 평가대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1. 설립 목적의 달성도
 2.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정성
 3.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4. 전시 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 실적
 5.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에 요청할 수 있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박물관 및 미술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평가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 ⑤ 법 제26조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 ⑥ 법 제26조 제4항에 따른 인증 박물관·미술관은 옥외간판, 각종 문서, 홍보물 및 박물관 또는 미술관 홈페이지 등에 해당 인증사실 및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 실시 및 평가인증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11. 29.]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6조 제3항에 따른 인증 박물관·미술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법 제27조 제1항), 그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법 제27조 제2항).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제22조에 따른 폐관 신고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인증자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시정요구와 정관(停館)

이 법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그 시설과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법이나 설립 목적을 위반하면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법 제28조 제1항), 이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법 제28조 제2항).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관(停館)을 명할 수 있다(법 제28조 제3항). 이 때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과 관리·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법 제28조 제4항).

3) 등록의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법 제29조 제1항).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17조의2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 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1조를 위반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28조 제3항에 따른 정관명령을 받고도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정관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 목적을 위반하여 박물관자료나 미술관 자료를 취득·알선·중개·관리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28조 제1항 단서).

이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대표자는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하며(법 제29조 제2항),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등록 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법 제29조 제3항).

4) 보 고

이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 또는 관할 등록 박물관과 미술관의 관리·운영, 관람료와 이용료, 지도·감독 현황 등의 운영 현황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30조 제1항).

또한 시·도지사는 제16조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의 등록이나 제22조 제4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의 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30조 제2항).

5) 청 문

이 법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법 제31조).

1. 제18조제4항에 따른 설립 계획의 승인취소
2. 제28조제3항에 따른 정관명령
3. 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 ‘박물관미술관법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597호, 2019. 11. 26., 일부개정]’에 따라 2020년 5월 27일부터는 아래와 같이 개정된다.

1. 제6조의2에 따른 자격취소
2. 제18조제4항에 따른 설립 계획의 승인취소
3. 제28조제3항에 따른 정관명령
4. 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6) 운영자문·협력 등

1) 중요사항의 자문

이 법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법 제32조 제1항).

1. 제9조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
2. 제11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자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도 문화재위원회에 자문을 하거나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협회나 미술관 협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법 제32조 제2항).

1. 제9조 제3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3. 제18조에 따른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에 대한 지원의 방향 및 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자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

이 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관한 자료의 효율적인 유통·관리 및 이용과 각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체제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을 구성한다(법 제33조 제1항).

1. 전산 정보 체계를 통한 정보와 자료의 유통
2.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정리, 정보처리 및 시설 등의 표준화
3.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호 대여 체계 구비 등 박물관이나 미술관 운영의 정보화·효율화
4. 그 밖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또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도서관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원·도서관·문화예술회관 등 다른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법 제33조 제2항). 이 때에 협력망의 조직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20조)으로 정한다(법 제33조 제3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20조(협력망 구성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은 박물관 협력망과 미술관 협력망으로 구분한다.

② 박물관 협력망과 미술관 협력망에 각각 중앙관과 지역대표관을 두되, 박물관 협력망의 중앙관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이, 미술관 협력망의 중앙관은 국립현대미술관이 되며, 박물관 협력망과 미술관 협력망의 지역대표관은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중앙관에 통보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협 회

이 법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관한 정보 자료의 교환과 업무협조,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연구, 외국의 박물관이나 미술관과의 교류, 그 밖에 박물관이나 미술관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박물관 협회 또는 미술관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법인 설립을 각각 허가할 수 있다(법 제34조 제1항).

이 때에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고(법 제34조 제2항),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34조 제3항).

4)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설립

이 법에 따라 정부는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이용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법 제35조 제1항). 이 때에 문화재단은 법인으로 하며(법 제35조 제2항), 문화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법 제35조 제3항).

또한 이 법에 의거 문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립 박물관 공연장 운영
2. 문화예술 창작품 개발·보급
3. 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제작 및 보급
4. 문화상품점, 식음료 매장, 그 밖의 편의 시설 등의 운영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그 밖에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에 필요한 사업

문화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법 제35조 제5항),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법 제35조 제6항). 또한 정부는 문화재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문화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법 제35조 제7항).

제3장

● 박물관미술관법의 법적 문제점 검토

I. 박물관미술관법의 구조 및 체계의 문제점

II. 박물관미술관법의 주요 쟁점별 문제점

제3장

박물관미술관법의 법적 문제점 검토

I. 박물관미술관법의 구조 및 체계의 문제점

1. 총칙 규정의 체계에 관한 사항

현행 박물관미술관법은 총 9개 장(章), 40개조로 구성되어 있다.⁵⁰⁾ 1991년 제정 당시의 박물관미술관법⁵¹⁾은 별도의 장 편성 없이 총 27개조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후 1999년 박물관미술관법 전부개정⁵²⁾을 통하여 현행의 9개 장 편성의 구조가 정립되었다. 이에 따라 현행 박물관미술관법 제1장에 해당하는 총칙의 장에는 목적(제1조), 정의(제2조), 박물관·미술관의 구분(제3조), 사업(제4조), 적용 범위(제5조),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제6조), 운영위원회(제7조), 재산의 기부 등(제8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 수립(제9조),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수집 등의 원칙(제10조)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박물관미술관법의 총칙상 규율이 법체계상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 법률의 총칙 규정에는 당해 법률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적·기본적·총괄적 사항을 담는 것이 일반적이며,⁵³⁾ 당해 법률이 지향하는 정책적 목표나 기본적 이념 등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

50) 법률 제15817호로 2018. 10. 16., 일부개정되어 2018. 11. 17.부로 시행되고 있는 박물관미술관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장편성과 조항 개수를 말한다.

51) 박물관미술관법(법률 제4410호), 1991. 11. 30., 제정, 1992. 6. 1. 시행.

52) 박물관미술관법(법률 제5928호), 1999. 2. 8., 전부개정, 2000. 2. 9. 시행.

53)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기준」, 2019. 4, 45면.

단체 등의 책무·책임 등에 관한 규정이 총칙에 포함된다. 또한 해당 법률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핵심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 법률이 적용되는 대상이나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적용 범위에 대한 규정, 다른 법률과의 규율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규정 등이 총칙의 장에 편성된다. 물론 총칙의 장에 반드시 특정 규정을 두어야 할 입법상 원칙이 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⁵⁴⁾ 하지만 해당 법률과 관련하여 원칙적·기본적·총괄적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규율사항을 총칙의 장에 두는 것은 해당 법률의 유기적 체계성과 규정상 명확성을 저하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법률이 추구하는 입법정책상 목표달성의 효과성마저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최대한 지양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박물관미술관법상 총칙의 장에 포함되는 규정 중에서는 총칙의 성격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실체적인 성격의 조항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 특히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에 관한 자격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인 제6조나 각 지방 분관을 포함하여 등록한 국·공립의 박물관과 미술관의 전문성 제고와 공공 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 합리화 제고를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운영 위원회의 법적 근거인 제7조,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재산의 기부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는 제8조 등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규율사항으로서 총칙의 장에 두는 것이 부적절하며 본칙 조항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의 수립에 관한 근거(제9조)가 총칙에 포함되어 있는 바, 그 규율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의 수립·시행 책무(제9조제1항),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의 소관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 계획 수립·시행 의무(제9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해당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 계획 수립·시행 의무(제9조제3항)이라는 다소 이질적인 성격의 책무 내용이 혼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총칙에 포함되는 책무·책임 또는 정책수립의무 등에 관한 조항은 해당 법률

54) 법제처, 앞의 책, 45면.

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해야 할 책무 등을 정하는 것이 통상적인데⁵⁵⁾ 박물관미술관법 제9조는 중앙행정기관의 기본 시책 수립 책무에 이어서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구체적인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구조를 벗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박물관·미술관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의 수립 근거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정책상 논의와 별개로, 현행 박물관미술관법 제9조는 총칙의 장에 걸맞는 규율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수집 등의 원칙’에 관한 규율도 박물관과 미술관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할 행정 주체가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일반적 원칙을 선언하는 규정이 아니라 박물관과 미술관의 단위에서 준수해야 할 자료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 즉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박물관과 미술관 관련 정책의 추진방향과 관련된 제반 원칙에 관한 조항이 박물관미술관법 총칙의 장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현행 박물관미술관법상 총칙의 장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文化享有)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⁵⁶⁾을 달성하기 위한 원칙적·기본적·총괄적 사항을 체계적으로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박물관미술관법상 총칙의 장에 내재된 비체계성은 해당 법률 전체의 체계정합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그 뒷받침이 되는 법령상 근거가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면에서 박물관미술관법상 총칙 장의 비체계성을 해소하기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55) 법제처, 앞의 책, 64~65면.

2. 규율의 연계성에 관한 사항

박물관미술관법의 두 번째 법체계상 문제점으로 규율의 연계성의 부족을 지적할 수 있다. 박물관미술관법의 주요한 목적이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상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있다고 할 때, 결국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동 법률의 핵심적인 제도가 바로 등록제도라고 하겠다. 그런데 박물관미술관법 제16조에 규정된 이러한 등록제도가 동 법률상의 다른 제도와 법적으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지 않아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즉 박물관미술관법 제12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박물관·미술관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립 박물관·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가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동 법률은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박물관미술관법 제16조제3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4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법에 따른 등록이 일정한 요건에 대한 내용상 심의를 전제로 한 진입규제임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하나의 사전진입규제인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제도를 별도로 규정하면서 양 제도(등록심의-설립타당성 사전평가) 간의 법적 관계에 대해 명시적인 규율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규율의 연결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⁵⁶⁾ 따라서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이러한 규율구조는 중복규제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동시에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이 아닌 경우, 현행 규정으로는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경우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대상별로도 절차의 통일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56)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제도와 인증제도의 연계 및 평가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해외제도의 시사점에 대해서는 차현숙 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문화체육관광부, 2015, 59-62면 참고.

사전규제 뿐만 아니라 사후규제의 차원에서도 박물관미술관법의 핵심적 행정수단인 등록제도의 법적 연계성 미비의 문제가 드러난다. 박물관미술관법 제26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후 3년이 지난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제26조제2항),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박물관 및 미술관을 인증할 수도 있다(제26조제3항). 2016년 박물관미술관법 일부개정(법률 제14204호)을 통해 도입된 이 제도는 박물관·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상의 한계 및 문제점을 보완하여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일종의 후속규제인 셈인데, 이러한 제도가 진입규제인 등록제와 법적으로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서는 박물관미술관법은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박물관미술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인증 박물관·미술관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을 뿐이다(법 제27조제1항제2호). 이후 다시 살펴보겠지만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제도는 박물관미술관법의 핵심적인 규제수단이라고 할 것인바, 동 법률 내 다른 규제수단과의 법적인 연관성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이렇다보니 법률 내의 규제들이 각각 고립적으로 적용되어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실효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고, 수범자의 입장에서는 중복 규제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한 실정이다. 이처럼 박물관미술관법은 등록제를 중심으로 하여 규율의 연계성 부족이라는 법체계상의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3.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박물관미술관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동 법률은 박물관을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

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로(법 제2조제1호), 미술관을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로(법 제2조제2호) 각각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한 다음 이들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물관과 미술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일반법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문제는 이렇게 광범위한 개념 포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닌 다른 부처가 관할하는 별도의 법령상 규율을 적용받는 유사한 시설이 존재하고 있으며, 박물관미술관법에서 이러한 다른 법령과의 적용 관계에 대하여 다소 모호한 규정을 두고 있어 적용상의 불필요한 혼선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박물관미술관법에서 다른 법령과의 적용 관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두고 있는 조항은 제5조 ‘적용 범위’로서 이에 의하면 “이 법은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관, 예술관, 문화의 집, 야외 전시 공원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는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은 제외한다.”고 한다. 그리고 동 조항의 위임을 받은 박물관미술관법 시행령⁵⁷⁾ 제2조제1항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5조에 따라 법이 적용되는 문화시설을 인정하려면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동물원이나 식물원 또는 수족관 중에서 인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체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로는 첫째, 법 제5조에서 적용대상으로 들고 있는 문화시설의 개념범주가 단순한 예시인지 한정적 열거인지가 불명확하다는 점, 둘째, 문화시설의 개념범주로 규정된 내용들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포섭되지

5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2019. 7. 2. 시행.

않는 것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점(대표적으로 문학관이나 과학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셋째, 박물관미술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할 수 있는 문화시설의 범주를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동물원이나 식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법 제5조에서의 광범위한 개념 범주가 행정입법 단계에서 세 가지 문화시설로 축소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빈약해보인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박물관미술관법 제5조 단서는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문구를 단순히 문헌적으로만 해석할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한 시설, 예를 들어 「문학진흥법」 제4장에 따른 ‘문학관’이나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상 ‘과학관법’이라 함)에 따른 ‘과학관’ 등은 박물관미술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반대로 박물관미술관법 제5조 단서를 법체계적으로 해석할 경우 동 조 본문에서 열거되고 있는 문화시설의 범주에서 문학관이나 과학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⁵⁸⁾ 동 조 단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해석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박물관과 미술관이 아우르고 있는 개념 범주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이를 법체계에 포섭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입법상 한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현행 박물관미술관법은 제5조와 같은 모호한 적용 관계에 관한 규정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적용상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마저도 흔들리고 있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는 유사 시설의 적용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기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8) 과학관이나 문학관 등은 박물관미술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이 “동물원이나 식물원 또는 수족관”만을 적용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박물관미술관법 제5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II. 박물관미술관법의 주요 쟁점별 문제점

1. 박물관·미술관 관련 정책 추진체계의 불명확성

박물관미술관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진흥 정책에 관한 일반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추진체계에 관한 법적 규율이 미비하다. 앞선 법체계상의 문제점에서 살펴본 것처럼 법률의 기본방향이 담겨져 있어야 할 총칙의 장에서 주로 박물관과 미술관의 구분을 토대로 박물관과 미술관의 운영이라는 미시적인 단위에서의 규율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총칙 중 제9조에서 규정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 수립”에 관한 규율은 그마저도 기본 시책에 관한 사항과 진흥 계획에 관한 사항이 혼재되어 있어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한 법적 토대로서의 구실을 충실히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입법례의 경우를 살펴보면, 우선 과학관법은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법적 근거(제4조의2)와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제4조의3)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각각 명시하여 과학관육성 정책을 일관된 계획에 따라 효과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충실히 구축하고 있다. 또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하여금 과학관 운영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법 제4조의4)도 참조할 부분이다. 마찬가지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상 ‘동물원수족관법’이라 함)의 경우에도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법적 근거(법 제2조의2제1항)를 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동물원수족관법 제2조의2 제3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시·도별계획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인력 및 예산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정책추진의 실효성까지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타입법례와 비교할 때 현행 박물관미술관법은 박물관·미술관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동 법 제9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 수립’에 관한 조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조항’으로 개선하여 그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한편,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박물관·미술관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추진체계 확보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박물관·미술관 관련 위원회 규율의 산재 및 공백

박물관미술관법에는 정책 심의·의결에 관한 위원회 규정은 없으나, 몇 가지 관련 규정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박물관미술관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국·공립의 박물관과 미술관(각 지방 분관을 포함)이 전문성 제고와 공공 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설치하는 박물관·미술관 운영 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 한다)가 있다(법 제7조제1항). 운영 위원회는 ① 박물관·미술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② 박물관·미술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③ 박물관·미술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④ 다른 박물관·미술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영 제6조제4항).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기증품을 기증받고자 하는 경우 수증여부를 결정하는 수증심의위원회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다(법 제8조제2항). 또한 국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은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및 개인이 해당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증품을 기증하여 감정평가를 신청한 경우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를 두어 감정평가를 할 수도 있다(법 제8조제3항). 이와 같은 운영 위원회, 수증심의위원회,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소속되어 박물관·미술관의 운영 과정에서 전문적인 심의가 필요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다루는 위원회들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육성정책에 관한 사항에 관해 종합적으로 심의나 자문 기능을 하기는 어렵다.

한편 법률상 근거는 없지만 박물관미술관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위원회로, 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나 그 밖에 학예사 자격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학예사 운영 위원회도 있다(영 제5조). 학예사 운영 위원회가 단순한 자문이 아닌 학예사 제도 관련 사항의 심의를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임입법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⁵⁹⁾

마지막으로 박물관미술관법에 직접적으로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다. 박물관미술관법 제32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 ② 법 제11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자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도지사의 경우에도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 ②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③ 법 제18조에 따른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④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에 대한 지원의 방향 및 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자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도문화재위원회에 자문을 하거나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협회나 미술관 협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법 제32조제2항). 이처럼 박물관미술관법의 중요 사항에 대한 자문을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이와 같은 현행의 법체계는 위원회의 난립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한편으로 박물관과 미술관에 고유하게 적용되어야 할 전문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 실무적으로도 박

59) 이에 관해서는 본 보고서의 연구범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상세하게 논의하지 않음을 밝혀둔다.

물관 및 미술관 정책에 관해 문화재위원회 개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분명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 검토해본 것처럼 박물관미술관법에 위원회와 관련된 규율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지만 정작 박물관미술관 관련 정책을 전담하여 전문적으로 심의 또는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앞서 몇 차례 지적한 것처럼 현행 박물관미술관법은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무척 취약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진흥 정책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6월 정부가 발표한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2019~2023)」에서 제시한 대표적인 추진과제인 ‘(가칭)박물관미술관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은 입법정책적인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가칭)박물관미술관정책위원회’는 관계부처, 현장·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위원회로서의 방향성을 지향하며, 박물관·미술관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시설 건립·운영의 타당성,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⁶⁰⁾ 이러한 위원회의 설치가 정책적으로 결정된다면 그에 따른 법제 정비도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 경우 위원회 도입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나 조정 등을 필요로 하는 관련 규정들에 대한 세부적인 정비작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3.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미술관 정책기능의 한계

박물관미술관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가지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 의무(제9조제3항),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제12조),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에 대한 지원·육성 책무(제13조제2항), 특별

6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박물관·미술관 -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2019~2023) -」, 2019. 6., 9면.

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공립 박물관·미술관과 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관련 업무(제16조제1항),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 발급 업무(제17조제1항), 변경등록 업무(제17조의2), 사립 박물관·사립 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관련 업무(제18조), 유희 공간 활용 관련 업무(제19조), 폐관 신고 관련 업무(제22조), 경비 보조 등의 업무(제24조) 등이 박물관미술관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역할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역할들이 대부분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운영에 있어서 미시적인 행정관리적 차원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박물관과 미술관의 육성을 위한 각종 정책의 컨트롤타워는 중앙행정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중앙행정기관이 직접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지방분권이라는 동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행 박물관미술관법상 박물관·미술관 관련 육성 정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역할과 관련된 규율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⁶¹⁾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을 뿐 이후의 후속조치로서 실제로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적인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 즉 조례를 통하여 진흥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구체화될 수 있는 상위법상의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더 나아가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육성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평가인증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도 아쉬운 지점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해나가기 위해서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2019~2023)」을 통하여 ‘지역문화거점’으로서의 박물관·미술관을 위한 지자체 역할 강화를 목표로,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미술관 정책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61)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사립박물관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혜인, 지방자치단체 연계 사립박물관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참고.

과제를 제시하였다.⁶²⁾ 이러한 정책적 과제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의 체계적 정비도 아울러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4. 박물관·미술관 등록 및 평가제도의 운영체계 실효성 미흡

(1) 등록제도의 주체 및 절차 등에 관한 문제

앞서 검토한 것처럼 박물관미술관법상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설립·운영관리의 핵심적인 수단은 법 제16조에 따른 등록제도이다. 이러한 박물관미술관법상 등록제도는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과 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등록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⁶³⁾ 공적(公的) 주체와 사적(私的) 주체를 모두 통합하여 단일한 진입규제로서 등록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즉 현행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주체는 국가가 되는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 문헌대로라면 국가가 국립박물관이나 국립미술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구조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법 제11조에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 박물관이나 국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사전협의절차를 두고는 있지만 이러한 협의를 통해 등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협의는 협의대로 진행하고 등록은 별개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⁶⁴⁾ 그리고 이는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운영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현행

6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박물관·미술관 -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2019~2023) -」, 2019. 6., 9면.

63) 여기서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하나, 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이원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은 진흥적 성격도 일부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등록 표시에 관한 박물관미술관법 제17조제2항이나 경비 보조 등에 관한 같은 법 제24조 등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64) 박소현, 박물관 설립·등록기준 및 평가인증제도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61면 이하에서도 등록제도의 절차적 결합, 등록 사후관리의 취약성 등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대로라면 지방자치단체가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구조가 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립박물관이나 국립미술관을 설립하려면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영 제7조제2항). 이처럼 일반 사인이나 대학이 신청주체가 되는 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의 경우와 그 법적 성격이 상이할 수밖에 없는 중앙행정기관 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 지방자치단체 간 공법관계의 구도가 등록제라는 단일한 진입규제 안에서 모두 포함되어 있는 형국인 셈이다. 등록이라는 진입규제를 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없는 신청에 대하여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단순하게 상정할 경우 이와 같은 복잡한 양상의 등록제 운용의 타당성도 인정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 법 제16조제3항이나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심의”는 박물관미술관법상의 등록제도가 불확정 개념에 기반한 법정 요건에 대한 내용심사를 전제로 한 허가와 유사하게 운용될 수 있는 소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박물관미술관법에 따른 등록제도가 단순한 등록제가 아니라면 현행과 같이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 모두를 포괄하고 있는 규정형태는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2) 평가·인증제도와 연계성에 관한 문제

이러한 박물관미술관법상 등록제도는 몇 가지 법적 문제로 인하여 실효적인 운영관리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첫째, 박물관미술관법상의 다른 진입규제와의 연계성이 단절되어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 제11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협의나 법 제12조의2에 따른 국립 박물관·국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등의 제도가 법 제16조에 따른 등록제도와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법 제18조에 따른 사립 박물관·사립 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제도도 법 제16조에 따른 등록제도와 법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규율이 누락되어 있다. 만약 전혀 상관없는 별도의 제도

라고 본다면 이는 수범자의 입장에서 일종의 이중규제 또는 과도한 규제장벽으로 작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둘째, 법 제3조에 따르면 박물관과 미술관은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각각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정작 등록제도는 등록요건을 규정하면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 학예사, 시설의 규모 등의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구분하고 있어(영 제9조제1항) 상위법령과 하위법령 간의 체계가 합치되지 않음은 물론 등록유형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즉 박물관미술관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에 의하면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분류된 종합박물관이나 전문박물관 등의 개념이 상위법령상 근거가 희박하고 양 개념간의 특별한 차별성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또한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된 ‘문화의 집’의 경우, 도서·비디오테이프 및 콤팩트 디스크 각각 300점 이상을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 요구하고 있으며, 비디오테이프 레코더가 2대 이상 설치된 비디오 부스나 콤팩트디스크 플레이어 4대 이상 설치된 콤팩트디스크 부스 등의 문화공간 확보를 시설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어서 해당 기기를 더 이상 활발하게 사용하지 않는 법현실과 맞지 않다는 점의 문제도 지적될 수 있다. 이는 주로 시행령상의 규율 정비에 관한 문제로서 당장의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박물관미술관법상의 박물관과 미술관의 구분과 하위법령상의 구분이 서로 조화롭게 합치할 수 있도록 법체계 전반을 정비하기 위한 점진적 접근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박물관·미술관이 설립되기 이전까지의 절차-국립의 경우에는 설립 협의(법 제11조), 공립의 경우에는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법 제12조의2), 사립의 경우에는 설립 계획 승인(법 제18조)와 등록(법 제16조) 절차, 그리고 이후 평가인증(법 제26조) 간의 환류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즉 등록된 박물관·미술관이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사후에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후속조치에 관한 법적 근거 없이는 현행 등록 및 평가·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현행법상 시정요구와 정관명령(법

제28조), 등록취소(법 제29조) 등의 제재적 성격의 등록제 후속조치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이러한 불이익처분만으로는 행정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없다. 또한 등록 이후의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위해서는 전국의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운영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된 등록요건이 시설과 인력요건에 대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점검할 필요도 있다.

제4장

박물관미술관법의 개선방향 및 개정방안

I. 박물관미술관법의 개선방향

II. 박물관미술관법의 쟁점별 개정방안

제4장

박물관미술관법의 개선방향 및 개정방안

I. 박물관미술관법의 개선방향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개선방향

박물관미술관법에서 나타나고 있는 법적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 쟁점별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거시적 차원에서 동 법률의 개선방향을 도출해 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제시할 수 있는 개선방향은 박물관미술관법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정책기능 강화이다. 앞서 분석한 것처럼 현행 박물관미술관법은 이미 총칙의 장에서부터 동 법률이 추구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한 국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하는 정책의 단계가 법률에서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박물관과 미술관 단위에서 적용되어야 할 미시적 수준에서의 규율 사항 등이 혼재되어 있어 정책기능에 대한 비체계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 시책 수립을 위한 규정은 존재하기는 하나 중장기 차원에서 정책을 설계하기 위한 종합적 성격의 행정계획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가 빈약한 상황에서 세부단위의 진흥 계획 수립 근거만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위원회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있지만⁶⁵⁾ 특정한 사안에 관한 위원회 일 뿐, 박물관 및 미술관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미비되어 있다. 또한, 박물관과 미술관을 그 설립 및 운영 주체별로 나누어 규율하고는 있지만

65) 예를 들어 박물관미술관법 제7조의 운영 위원회, 제8조의 수증심의위원회 및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 등이 있다.

그 각각의 특성을 반영한 규율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평가나 지도·감독 등의 적지 않은 규제수단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들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박물관미술관법의 중요한 개선방향 중 하나는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진흥 정책을 체계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강하고 정비하는 것에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특히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이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립해 나가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2. 박물관 및 미술관의 효과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개선방향

두 번째 개선방향으로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효과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법적 연계성의 확보를 제안하고자 한다. 박물관미술관법의 핵심적인 진입규제수단인 등록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관련된 법적 문제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확인한 것처럼, 현행 박물관미술관법에 따른 등록제도는 동 법률 내의 다른 진입규제인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협의나 공립 박물관·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등과의 규율적 연계성이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후속조치에 관한 규율도 시정요구와 정관명령(법 제28조), 등록취소(법 제29조) 등의 제재 위주로만 마련되어 있어 등록 이후에 요건 충족 여부를 조사하여 등록된 박물관과 미술관을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박물관미술관법의 규율적 연계성 부족의 문제는 등록유형의 관리에서도 또한 나타난다. 박물관과 미술관을 그 설립·운영주체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 법 제3조의 취지와 비교할 때,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 학예사, 시설의 규모 등을 기준으로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구분하여 등록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상위법의 명시적 근거 없이 별도의 구분을 규정하고 있는 영 제9조제1항에 대한 위임입법원칙의 위배소지 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별개로, 상위법령인 법률과 하위법령인 행정입법 간의 정합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박물관 및 미술관의 효과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법률 내 규정

간의 연계성, 법률과 하위법령 간의 연계성이 체계정합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법령의 규율이 체계정합성을 갖추지 못할 경우, 이를 근거로 한 정책집행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적 혼선을 야기할 수 있고, 규율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수범자나 행정실무의 예측가능성도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박물관미술관법의 규율에 있어서 법적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개선방향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일반법으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한 개선방향

마지막으로 박물관미술관법의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일반법으로서의 위상 강화를 세 번째 개선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앞서 검토한 것처럼 박물관미술관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개념을 매우 폭넓게 포섭하여 정의하고, 이들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행정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어 박물관 및 미술관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법적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규율대상 범주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 기술발전을 토대로 속속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박물관과 미술관이 동 법률의 규율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점점 더 난해해지고, 이에 따라 등록제도 등의 운용 과정에서 법적용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⁶⁶⁾

이와 관련하여 박물관미술관법 제5조에서는 적용범위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으나, 일반적인 입법례와 달리 동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개념범주를 보다 확장시키면서 행정입법에서 다시 이를 한정적으로 축소하는 특이한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법해석상의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행의 법체계와 같이 박물관과 미술관의 개념 범주를 최대한 확장하여 규율대상을 광범위하게 포섭하는 방식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박물관과 미술관의 개념 범주에 관한 최소한도의 명확한 요건을 제시하고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은 규율

66) 유사법률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6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9년 제정되어 2020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상에서 과감하게 제외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입법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후자의 방식이 보다 간명하게 법적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법현실을 지나치게 도외시하는 법제개편일 수 있다는 점은 적지 않은 단점으로 평가된다. 우선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의 변화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박물관과 미술관의 개념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수용해나갈 수 있는 탄력적 법제를 설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전자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박물관과 미술관의 등록요건 등을 새로운 법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법이 적용되는 대상범주의 명확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⁶⁷⁾ 이를 통해 박물관미술관법이 박물관과 미술관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II. 박물관미술관법의 쟁점별 개정방안

여기에서는 제3장에서 검토한 법적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박물관미술관법의 구체적인 개정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다만, 법률의 모든 조문을 대상으로 개정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문의 순서 등 법률 내에서의 체계와 구조는 고려하지 않고 각 쟁점별로 개정방안을 도출하였다.

1. 박물관·미술관 정책에 관한 책무조항과 계획조항의 정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조항

현행 박물관미술관법 제9조의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 수립”에 관한 규정을 정하면서 기본 시책에 관한 사항과 진흥 계획에 관한 사항이 혼재되어 있어 박물관 및

67) 박물관미술관법 제3조에서는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박물관·미술관, 공립 박물관·미술관, 사립 박물관·미술관, 대학 박물관·미술관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반해, 미술관법 시행령 별표2에서는 자료의 수와 시설규모 등에 따라 제1종 박물관·미술관과 제2종 박물관·미술관으로 구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미술관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법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9조의 진흥 시책 수립에 관한 조항에서 책무 조항과 계획 조항을 각각 분리하여 별도의 조항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책무 조항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할 시책의 강구 의무와 더불어 책무 이행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상 조치 확보 노력의무를 첨가하여 해당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항들을 반영하여 법률 개정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 정비 방안

| 현 행 | 개정안 |
|--|--|
| <p>제 9 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공·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육성, 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에 따라 소관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 <p>제00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육성, 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 삭 제 ></p> |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근거 조항

또한 책무조항과 계획조항을 분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미술관 정책 관련 역할 강화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즉 책무조항을 별도

로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단순한 진흥 계획 수립 의무에서 벗어나 좀 더 거시적인 차원의 진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한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능 강화라는 또 다른 입법정책상의 목표도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항들을 반영하여 법률 개정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기본계획 규정 신설 방안

| 현 행 | 개정방안 |
|---------|---|
| < 신 설 > | <p>제00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부문별 육성지원 시책과제 및 장기·중기·단기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필요한 재원(財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박물관 및 미술관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5.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③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현 행 | 개정방안 |
|---------|--|
| < 신 설 > | <p>제00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p> <p>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2. ‘박물관·미술관정책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1) 박물관·미술관정책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박물관미술관법상에 박물관미술관 관련 정책을 전담하여 전문적으로 심의 또는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박물관·미술관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⁶⁸⁾ 이미 박물관미술관법 자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위원회 관련 규정이 적지 않고,⁶⁹⁾ 「문화재보호법」 제8조

68) 2019년 6월말 기준 법률과 대통령령에 근거한 행정기관위원회는 총 574개이며, 이 중 대통령,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행정위원회가 40개, 자문위원회가 534개이다.(행정안전부, 2019년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 2019.8)

69) 현행 박물관미술관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영 위원회’ 및 제8조 제2항 및 제3항의 ‘수증심의위원회’와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는 각각의 박물관과 미술관 소속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제시하는 ‘정책위원회’와 중복되는 개념은 아니다.

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위원회를 통하여 주요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법 제32조)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책위원회 규정을 신설할 경우 해당 규정을 삭제할 것인지, 또한 정책위원회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위원회와 시·도지사 소속의 정책위원회로 이원화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단일법 내에 위원회 관련 조항이 과다할 경우 입법부담을 고려하여 전자의 설치근거만을 마련하는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표] 박물관·미술관정책위원회 신설 방안

| 현 행 | 개정안 |
|---------|---|
| < 신 설 > | <p>제00조(박물관·미술관정책위원회) ① 박물관과 미술관의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박물관·미술관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박물관과 미술관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박물관·미술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3. 박물관·미술관의 등록에 관한 사항 4. 박물관·미술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사항 5. 학예사 자격제도에 관한 사항 6. 제33조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책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p>③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

| 현 행 | 개정안 |
|-----|---|
| | <p>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 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p> <p>⑤ 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박물관 및 미술관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p> <p>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⑦ 그 밖에 정책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2) 자문 규정의 정비

위 정책위원회 규정의 신설에 따라 현행법 제32조제1항의 내용은 삭제하는 대신 동 조항 제2항은 존치하도록 관련 조항의 정비안을 함께 제안하고자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의 정책위원회에도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자문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 경우에도 정책위원회 규정안에서 정책위원회 기능은 두되, 이러한 사항들을 반영하여 현행 법률 정비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자문 규정 정비 방안

| 현 행 | 개정안 |
|--|---|
| <p><u>제32조(중요 사항의 자문)</u>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p> | <p><u>제00조(중요 사항의 자문)</u> ④ < 삭 제 ></p> |

| 현 행 | 개정안 |
|--|---|
| <p>1. 제9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p> <p>2. 제11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p> <p>3.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자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p> <p>②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도문화재위원회에 자문을 하거나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협회나 미술관 협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p> <p>1. 제9조제3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p> <p>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p> <p>3. 제18조에 따른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p> <p>4.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에 대한 지원의 방향 및 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p> <p>5.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자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p> | <p>②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00조에 따른 정책위원회나 「문화재보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도문화재위원회에 자문을 하거나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협회나 미술관 협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p> <p>1. 제9조의4에 따른 시행계획</p> <p>2. ~ 5. <현행과 동일함></p> |

3. 박물관·미술관 등록제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박물관미술관법에 따른 등록제도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소 복잡한 법리상의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법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구분된 박물관과 미술관별로 각각의 법적 성격에 부합하는 진입규제

를 개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즉 현행 박물관미술관법 제16조를 분리하여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입규제에 대해서는 제2장에서,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입규제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에 대해서는 제5장에서 그에 합당한 규율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방안은 법률 전체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하여야 하므로 여기에서는 현행 제16조의 규율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등록제와 관련되어 있는 다른 진입규제와의 연계성을 법률상 명확히 하는 정도로 해당 조항을 개정하는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법 제11조에 따라 설립 협의 또는 제12조의2에 따른 사전평가, 제18조제1항에 따른 설립계획의 승인 등을 등록제도와 연관지우면서 국·공·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규율상 처리를 차별화하는 것은 일종의 점진적인 제도개선으로서 규제중복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반영하여 현행 법률 정비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현 행 | 개정안 |
|---|--|
| <p><u>제16조(등록 등)</u> ①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p> | <p><u>제00조(등록 등)</u> ①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u>다만, 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은 준공 후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u></p> |

| 현 행 | 개정안 |
|--|--|
| <p>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개관 전까지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4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단서 신설></p> <p>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심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p>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개관 전까지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4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u>다만 제11조에 따라 설립 협의 또는 제12조의2에 따른 사전 평가를 거친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p> <p>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심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4. 적용 범위 관련 규정의 열거방식 폐지

박물관과 미술관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박물관미술관법이 다른 법령과의 적용 관계에 있어서 불필요한 혼선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은 관련된 개념 범주를 광범위하게 규정하면서도 정작 필요한 개념은 누락되어 있는 현행 법 제5조의 ‘적용 범위’에 관한 조항의 문제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하겠다.⁷⁰⁾ 특히, 박물관 및 미술관과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는 문화시설을 일일이 열거한 다음, 다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다시 단서조항에서 제한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문 자체를 해석하기에도 모호한 측면이 있다. 또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문화전시시설 등이 있기 때문에 법률에서 그

70) 법 제5조는 적용 범위를 열거방식으로 규율하고 있고, 열거된 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박물관미술관법의 적용범위가 정해지는 바, 현행 박물관미술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5조에 따라 법이 적용되는 문화시설을 인정하려면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동물원이나 식물원 또는 수족관 중에서 인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 제5조 제1문 및 단서 조항과 시행령 제2조는 충돌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명칭을 직접 열거하기보다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면서도 해석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형 이외의 문화시설도 포섭가능하도록 기존의 열거방식을 폐지하여, 적용 범위를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해석에서 오는 혼란을 방지하는 규율 방식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항들을 반영하여 현행 법률 정비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현 행 | 개정안 |
|---|---|
| 제 5 조(적용 범위) 이 법은 <u>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관, 예술관, 문화의 집, 야외 전시 공원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는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은 제외한다.</u> | 제00조(적용범위) 이 법은 박물관 및 미술관과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는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은 제외한다. |

5. 박물관·미술관 대상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현행 박물관미술관법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이에 따라 효율적인 계획수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이 없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과학적·객관적인 정책설계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박물관 미술관법에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의2에 따라 문화시설 운영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⁷¹⁾⁷²⁾

71) 이 실태조사의 결과는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공고되어 있으며, (https://www.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Seq=1286&pDataCD=0408010000&pType=), 이 내용을 보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시설현황, 인력현황, 소장자료, 프로그램의 실태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72) 해당 실태조사의 대상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서 공연시설(영화상영관 제외), 전시시설(화랑 및 조각공원 제외), 도서시설, 지역문화활동시설(청소년활동시설 제외), 문화보급·전수시설(전수회관 제외), 종합시설 중 문화예술회관으로 열거하고 있다.

박물관미술관법에서 다루고 있는 야외전시실 여부와 면적, 작업실 또는 준비실, 도난방지 시설 등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상세한 항목은 파악하기 어렵다.⁷³⁾

따라서 박물관미술관법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는 행정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관리의 측면에서도 효과적인 수단 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사항들을 반영하여 현행 법률 정비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실태조사 신설 방안

| 현 행 | 개정안 |
|---------|--|
| < 신 설 > | <p>제00조(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실태조사) 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73) 박물관미술관법 시행령 별표2에서는 등록요건을 규율하고 있는 바, 박물관·미술관을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하고 또한 개별 유형별로 자료의 수, 학예사 인원, 시설요건 등을 정하고 있다.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5장 결론

제5장

결론

박물관과 미술관은 문화와 예술뿐만 아니라 학문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공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의 문화향유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융복합 시설로써 새롭게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기술의 발전과 지방분권 등의 새로운 여건변화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있어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박물관과 미술관에 관해서는 박물관미술관법에서 규율되고 있으며,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박물관과 미술관을 별도로 운영·관리해 오던 것을 최근 박물관과 미술관을 통합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박물관·미술관의 정책기반을 체계화하고, 내실 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제도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에 관하여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박물관미술관법의 입법체계 및 구조, 입법연혁, 현행 법령을 검토하여 구조 및 체계의 문제점과 주요 쟁점별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법률 내에서 장의 구성이나 체계가 적합하지 않은 사항, 규율의 연계성 미비, 다른 법령과의 관계의 모호성 등을 지적하였으며, 쟁점별로는 박물관·미술관 관련 정책 추진체계의 불명확성, 위원회 관련 규율의 산재 및 공백,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능의 한계, 등록 및 평가제도의 운영체계 실효성 미흡에 관한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개선방향, 효과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개선방향, 일반법으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한 개선방

향을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박물관·미술관 정책에 관한 책무조항과 계획조항의 분리, ‘박물관·미술관정책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박물관·미술관 등록제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박물관·미술관 대상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적용 범위 관련 열거방식의 폐지에 관한 개정안을 도출하였다.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는 박물관미술관법 중에서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으로 연구의 범위를 특정하여 수행되었기 때문에 해당 법률의 모든 문제를 담고 있지는 않다. 현행 박물관미술관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개념 정의 및 유형, 학예사 자격제도, 세제혜택, 미술관 소장품 등록시스템, 스마트(디지털) 박물관·미술관 등 여전히 많은 쟁점들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후속적인 연구가 수행된다면, 법학적 연구방법과 더불어 국내외 실증적 자료조사 및 관련 학문 분야의 학제 간 연구 수행을 통해서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참고문헌

참고문헌

1. 단행본

국무조정실(관계부처합동),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 3개년 계획(2020-2022), 2019.4.15

김혜인, 지방자치단체 연계 사립박물관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박물관·미술관 -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2019-2023) -, 2019.6

문화체육관광부, 2019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2019.12

박소현, 박물관 설립·등록기준 및 평가인증제도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기준」, 2019. 4

차현숙 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연구, 한국법제연구원/문화체육관광부, 2015

2. 인터넷홈페이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현안분석 19-08
박물관·미술관 진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2019년 12월 29일 인쇄
2019년 12월 31일 발행

발 행 인 | 김 계 홍

발 행 처 |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전 화 : (044)861-0300

등록번호 | 1981.8.11. 제2014-000009호

홈페이지 | <http://www.klri.re.kr>

값 7,000원

1. 본원의 승인없이 전재 또는 역재를 금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 978-89-6684-999-4 93360

윤계형(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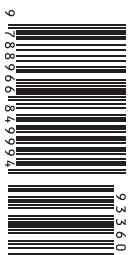
학 력

충북대학교 법학박사
(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실적 및 논문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장기 및 인체조직의 관리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

KLRI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값 7,000원

ISBN 978-89-6684-999-4 93360